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가다 (1) 프롤로그 ▶시리즈 11편

## 中·日 대표도시와 삼각교류 문화수도 광주의 길 찾는다

〈취안저우〉 〈요코하마〉

‘광주의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오는 10월 완공되지만 장밋빛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아직도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인가’에 의문을 품는 아시아인은 물론 문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광주를 대한민국 문화중심도시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국내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당위성과 광주가 보유한 문화지력과 자산을 소개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정말의 해, 갑오년은 이런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다른 아님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젝트 덕분이다. 광주가 아시아 대표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굳혀 문화자산을 아시아에 공식적으로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시는 역시 일본과 중국을 대표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요코하마, 취안저우 현지에서 공연, 전시 등 문화교류 행사를 올 한해 동안 진행한다.

광주는 오는 3월4일 이들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공연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에서 동아시아

아문화도시 행사 개막식 행사를 연다. 개막식에서는 한·중·일 예술제, 문화예술교육포럼, 문화예술교류행사 등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광주로 거듭날 수 있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를,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동아시아 개막행사에서도 오는 2015년 개최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을 알릴 계획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위원장 정동채·이하 추진위원회)는 광주만의 차별화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해남 출신 뮤지컬 제작자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에게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예술감독 지휘봉을 맡길 계획이다. 박 대표는 맘마미아, 아이다, 시카고 등 대중성과 작품성 있는 뮤지컬을 제작한 ‘미다스 손’으로 불린다.

추진위는 오는 3월 오프행사를 시작으로 9월까지 동아시아 유니버시아드 캠프와 동아시아문화도시 탐방 프로그램, 10월에는 광주비엔날레 동아시아 특별전,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 등 총 17개 행사를 개최한다

는 복안이다.

시는 광주가 아시아문화 교류 허브임을 감안,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회원으로 하는 (가칭)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 구성을 주도, 지속적인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는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다.

광주일보의 문화로 도시의 미래를 기약하고 있는 취안저우, 요코하마, 광주 등 3개 도시를 순회하며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준비 상황과 각 도시들의 문화자산 등을 소개하는 기획 특집을 연재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은행, JB금융 품으로

〈전북은행〉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광주노조·지역민 반발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JB금융과 BS금융이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은행 노조와 지역민의 반발 정세가 크고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아 오는 7월 인수까지는 험난한 여로가 예상된다.

지난 31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매각주관사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전북의 JB금융지주로 결론을 내렸다. 공자위는 “최고가 원칙과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 경제 발전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배경 설명을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의 반응을 의식한 듯 JB금융지주는 투 배크 체제를 보장하고 이익의 10%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가 매각이라는 원칙론에 기반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역환원을 주장했던 광주은행 노조가 반대투쟁을 선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운영안에는 인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했고, 금융시장에서 우려하는 자본확충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빠져 있어 속된 걱정이다”며 “시도민과 함께 강력한 인수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새해는 거침없는 말처럼 ‘청미의 해’ 갑오년 새해를 맞아 한국마사회 제주 경주마 목장에서 말들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올 한해 거침없이 달리는 말처럼 지역민 모두에게 희망이 피어나길 기원한다.

/제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알림 ‘광일춘추’ 필진 바꿉니다

전국 대표 지방 정론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을 모시고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컬럼 ‘광일춘추’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매일신문·경인일보·경남신문·강원일보·대전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8개사는 각계전문가로 필진을 구성, 우리 사회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 ◇이순원 소설가
  - ▲제1회 효석문학상(2000) ▲제5회 한무숙문학상(2000) ▲한국일보 총선보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건양대학교 석좌교수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한법재판소 자문위원
- ◇백승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
  - ▲전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연구원 초빙교수 ▲전 독일 막스플랑크역사연구소 초빙교수 ▲전 진단학회 총무이사
- ◇김병식 조명대학교 총장
  - ▲한국공화학원원장 정회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광주과학기술인 이사 ▲과학 칼럼니스트

## 새해 예산 355조8000억 광주·전남 730억 증액

국회 예산안 능력 의결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확정 처리했다. ‘예산안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광주·전남지역 국비 지원 예산은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건설에 200억원이 추가 배정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보다 730억원 증액됐다.〈관련기사 3·4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5조 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

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했지만 5조4000억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별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가 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대로 편성했던 복지예산이 국회로 거치면서 더욱 규모를 불린 것이다.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인 세계 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법안 등 40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지난 31일 본회의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73개 의안을 의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국회 국정원 개혁 7개 법안 의결

사이버정치활동 처벌 명문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법 명문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등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 이용, 이른바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기존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 국정원 정보관(10)의 정보수집과 관련, 국가기관·정당·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과격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국회 정보위 전임 상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강화와 국정원 직원에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직무집행거부권을 부여했다.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익보호를 강화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찰, 군인·군무원의 정치개입 행위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원은 저마다 다르지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2014 甲午年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